

다산포럼



김태희
다산연구소 소장

하노이. 지난 제2차 북-미 회담 장소였다. 이 사실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했다. 베트남과 우리나라는 비교적 거리가 있다. 중국 대륙에서 볼 때 베트남은 남쪽에, 우리나라는 동쪽에 위치한 오랑캐였다. 다만 우리나라는 대륙 질서에 비교적 순응적이고 적극적이었는데 반해, 베트남은 저항적이고 독립적이었다. 베트남은 대륙 지배에 저항하면서 새 왕조가 들어서곤 했으며, 명나라와 청나라의 침략도 물리쳤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 베트남도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다(1862). 우리나라는 서구 열강의 하나인 프랑스의 공격을 물리쳤지만(1866, 병인양요), 대신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를 재빠르게 답습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다.

2차 대전 후 베트남과 우리나라는 각각 분단되어 냉전의 최전선이 되었다. 북한은 미국과 전쟁을 종료하지 못한 채 휴전했

평화로 가는 길 멈출 수 없다

고, 북베트남 하노이 정권은 미국을 물리쳤다. 통일된 베트남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1986년 '도이 머이' 정책으로 개혁과 개방에 나서면서, 적국이던 미국과 교역하며 세계의 일원이 되었다.

하노이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가 합의되었다면 참으로 흥미로운 역사적 성취가 되었을 것이다. 역사적 역원을 과거 지사로 남기고, 자칭 문명국과 타칭 오랑캐들이 어울리며, 강대국 사이에 약속국이 당당하게 어울려 사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었다. 미국 중심, 양극 또는 다극 체제를 생각해 보며, 국제 질서에 관한 많은 상상력을 자극할 만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니었던 모양이다. 왜 기대했던 회담은 빈손으로 끝났는가. 회담 후 뒤늦게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일단은 엇볼 수 있다.

첫째 요구 사항의 불일치다. 미국의 요구는 영변 폐쇄 플러스 알파였고, 그 알파에 북한이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요구한 제재 완화에 대해 북한은 일부라고 주장했지만, 미국이 보기엔 사실상 전부의 양보를 인식되었다. 북한은 단계적으로 접근하고(이른바 스몰딜), 미국은 일괄타결(이른바 빅딜)을 목표로 삼았으며, 이 차이를 담판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회담이 무산된 또 하나의 원인은 트럼프

대통령도 불만을 토로했던 국내 요인이었다. 하필 그 시간에 마이클 코언의 정문회가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에 불만을 품고 북한과의 회담에 불만을 품은 여론이 미국에는 있다. 이러한 부정적 여론을 잠재울 정도의 성과가 아니라면 애중간한 합의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비록 2차 정상회담의 결과는 실망스럽지만 여기까지 온 것만도 대단하다. 2017년 북의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극에 달했다. 그러나 2018년 들어 김정은 위원장은 이를 지렛대로 협상을 제안했다. 북의 요구 사항은 안전 보장이었다. 그리고 경제를 완화해 주면 핵을 버리고 경제 발전에 매진하겠다는 것이다. 남북 분단이 화해의 전기가 마련되었다. 북과 미의 정상이 우호적인 회담을 가진 것은 역사적으로 큰 진전이었다.

회담 무산 후 양쪽의 태도는 대화 분위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군사훈련 축소를 기정사실로 했다. 김정은 위원장도 회담 후 대내 공식 발언 회사를 통해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을 더 절박한 혁명 임무는 없다"고 한 데서 대화의 기초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실질적 진전이 없으면 동력이 빠질 우려도 있다. 트럼

프 대통령은 동결과 현상 유지에 만족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마음이 다급할 수 있다. 이제까지 추진해 온 진전을 선불리 원점으로 돌리진 않겠지만, 더 이상 진전이 없다 보면 다른 돌발 변수에 동요할 수 있다. 평화를 구축하기는 더디고 힘들어도 파괴하기는 쉽다.

그냥 시간이 흐르게 해서 안 된다. 그동안 활약이 컸던 문재인 정부의 역할이 다시 주목된다. 그러나 당장 가시적 성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 같다. 미국 내 부정적 여론과 그 메카니즘 등을 포함하여 그간의 과정을 찬찬히 복기해 보아야 한다. 대화 기초를 유지하고 지속시키면서, 걸림돌을 우회하거나 극복하여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창의적인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정상을 결정하는 데 더 많은 자율성과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과 북, 평범한 주민들의 안녕이다.

지난해 봄에 베트남 다낭에 갔었다. 인기 있는 카페의 벽을 장식한 사진이 옛 남북 차림이었다. 서빙하는 젊은이도 같은 패션을 입었다. 그것은 단순한 추억거리 내지 장식용 패션이 되어 있었다. 격세지감이 들었다. 우리는 언제 대동강변 카페에서 평화스럽게 커피를 마시며 분단의 상처를 추억으로 돌아볼 수 있을까.

NGO칼럼

후쿠시마 핵 사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팀장

어제(3월 11일)는 후쿠시마 핵 사고가 발생한 지 8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후쿠시마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핵 사고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붕괴된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8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핵 사고 난민'이 아직도 수만 명에 이릅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물은 매일 수백 톤 이상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달리 처리할 방법도 없고 마냥 보관만 할 수 없어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민간 싱크탱크인 일본경제연구센터는 후쿠시마 복구 비용을 최대 800조 원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상황 보고서에서 출입이 금지된

곳뿐만 아니라 해저면 지역에서도 여전히 심각한 수준의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염 노동자들이 일하는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방사성 준위는 일반적인 원전 발전 시설에서 '응급 상황'으로 분류되는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고, 피난 구역 및 피난 지시 해제 지역 방사선 준위는 국제 권고 최대치보다 5~100배까지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린이를 포함해 일반 주민에게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이 정도의 오염이 22세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복구는 요원하기만 하고 핵폐기를 반감기가 수만 년이라고 했을 때, '영원한 봉인, 후쿠시마'라는 표현은 과하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핵 사고 이후 독일, 스웨덴 등 많은 국가들이 탈핵을 선언하고,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에 나서 정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시스템은 바꾸고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대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프랑스도 핵발전소를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핵발전소에서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이

유는 명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후쿠시마에는 역설적이게도 재생 에너지 발전소가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주민이 참여한 태양광 발전소가 방사능에 오염된 눈에 들어섰고, 바닷바람을 이용한 해상 풍력 발전소도 조성됐습니다. 어느덧 재생 에너지 자립률이 30%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후쿠시마 핵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한국에는 24개의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가깝게 영평에는 6기의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빛 4호기는 중대한 문제가 발견돼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고 문제의 원인을 민간 조사단이 조사중입니다. 4호기 뿐만 아니라 나머지 핵발전소에서도 매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격납 건물 철반 부식과 구멍은 물론 7개월 동안 화재 사건이 다섯 번이나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3월 9일)에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일반 가정집에서도 발생이 쉽지 않은 화재가 영광 핵발전소에서는 정기적 화재 진압 훈련 하듯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관계 당

국의 끝말은 '원인을 밝히고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입니다. 그 철저한 대책은 언제쯤 나올까요?

우리나라 핵발전의 현 상황은 분명 우려스러운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세계 최대의 핵발전소 밀집 지역이고, 빈번한 지진으로 가슴을 조입니다. 핵발전소의 화재 사고와 이상 신호 및 긴급 정지는 연례행사처럼 반복됩니다. 핵발전의 현주소가 이러한데 뜬금없는 주장들이 정치인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급기야 미세먼지가 심해진 이유가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까지 합니다. 그런 주장의 정치적 배경을 모르지 않으나, 결코 그 어떤 것도 국민의 안전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의 핵 사고는 체르노빌, 후쿠시마처럼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노후 핵발전소는 수명 연장 없이 발전을 멈추어야 하고 중대 문제가 발생한 발전소는 조기 폐쇄해야 합니다. 그런 핵발전소가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3·11 후쿠시마 8주기를 맞이하며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 우리가 잊고 있던 사실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기고

리더와 혁신, 고통 분담



김수관
조선대 대외협력처장

지난해 크리스마스 전날 오후 2시 40분, 마라도에서 승객 195명과 승조원 4명 등 199명을 태우고 모슬포항으로 향하던 여객선 블루레이 1호(199t)가 파도 근해에서 좌초됐다. 사고로 조타실이 물이 들어오는 등 선체 손상이 심각해 큰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빠른 대처로 단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상황이 종료됐다.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무전을 받고 즉각 사고 현장으로 달려간 '마라도 가는 여객선' 양정환 선장의 공이 컸다. 소속 회사가 다르지만 인명 구조에만 집중했고, 해경의 안내에 따라 평소 훈련한대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양 선장에게 전화를 걸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며 높게 평가하고 감사의 뜻

을 표했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전남 진도군 관매도 앞 맹골수로에서 좌초한 세월호. 선장과 선원 그리고 해양경찰의 대처 모습을 떠올린다. 인명을 최우선으로 평소 훈련한대로 신속하게 대응했으면 어땠을까?

리더가 중요하다.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가 이렇게 사람의 생사를 가른다. 조직의 리더는 조직의 생사를 결정한다. 리더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운명이 달라진다.

조선대학교는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안을 공유했고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학내 안정 및 학문·행정 단위 구조 개혁, 재정·시스템 혁신이 목표이다. 경쟁력이 낮은 학과는 과감히 통폐합하고 학문 단위를 특성화해 경쟁력을 갖도록 육성하며, 방만한 행정을 조직을 줄이고 성과와 연계된 보상 시스템을 갖추려고 한다.

최근 대학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조선대는 지역 사회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시 동구청과 지역 상생 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구는 과거 전남도청이었고 충장로 등 광주의 행정 및 상권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도청 이전, 신도시 개발, 인구의 지속적 감소 등으로 지역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조선대학교는 호남 지역 거점 종합대학으로서 소재지인 동구청의 지역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의 추진 범위에는 ▲도시 재생 뉴딜사업 협업 ▲취업·창업 지원 등 일자리 관련 사업 ▲보행 녹지 및 산림 복지 조성사업 ▲문화 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인프라 조성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구축 등이 있으며,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양 기관의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을 움직이는 두 개의 수레바퀴는 '교육과 연구'이다. 대학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도록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좋은 연구가 선행된다면 교육의 질은 함께 올라갈 것이므로 교육 평가와 연구 평가가 동시에 되어야 한다. 조선대학교는 연구 역량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향후 대학 평가 시 교육 역량 뿐 아니라 연구 역량 평가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대학은 본질적으로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혁신 선언 실천을 위해 구성원의 뼈를

까는 고통 분담이 필수이다. 이를 통해서 지역 사회의 관심과 응원을 끌어내야 한다. 긍정적(공개 토론 등) 등을 통해 문제점을 공유하고 혁신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지역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후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민립 대학에 걸맞은 지역민의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 구성원들의 책임감이 필수이다. 이를 위해 대학 역량 진단 평가 결과 및 대학 상황에 대한 통합된 내부 합의가 필요하며, 집행부의 과감한 혁신 드라이브가 요구된다.

나무가 10만 그루나 있는 숲에도 똑같은 모양의 잎사귀는 한 쌍도 없다.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면 해결책이 보인다. 최근 갈등을 노출한 구성원 사이에 양보와 타협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득권과 무책임을 버려야 한다. 이번 위기가 전화위복의 기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임시 이사 체제의 어려움이 있지만, 대학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로 역량을 집중한다면 지역민의 공감대를 얻고 우리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구성원은 물론 지역 사회,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는 밝은 눈을 가진 리더가 더욱 절실한 때이다.

社說

법정에 선 전두환 끝내 사죄 한마디 없었다

반성도 사죄도 없었다. 광주 시민들은 '광주 학살'의 책임자인 그에게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보여 줄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철저히 외면했다.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광주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게다가 공소 사실까지 전면 부인했다.

어제 오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국가기록인 자료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및 수사와 공판 기록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전 씨가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 소사는 없었으며, 기총 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한 5월 21일 오후 2시쯤 광주 불로교 상공에서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 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인 헬기 사격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 조 신부 외에도 수많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전일빌딩에 남은 150여 개의 탄흔이 있다. 광주일보가 보도한 '주한 미국대사관 비밀 전문' 등은 결정적 근거다. 전 씨는 법정에서 출석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이 "광주 시민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입을 굳게 다물고,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이거 왜 이래"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전 씨가 이날 보인 태도는 이제라도 진실을 털어놓고 속죄하기를 기대했던 광주 시민들을 우롱한 것이다. '5·18은 폭동'이라는 그의 주장은 온갖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의 진원이 되고 있다. 그는 마지막 반성의 기회마저 스스로 걸어차 버리고 말았다. 이제 신속한 재판을 통해 준엄한 단죄를 하는 수밖에 없다.

'5·18망언' 징계 언제까지 몽그적거릴 건가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황교안 대표가 처음 주재한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징계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5·18 망언이 나오게 지난 2월 8일이었으니까 벌써 한 달이 넘었지만 한국당은 계속해서 몽그적거리고 있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이종명·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한 바 있다.

한국당 윤리위가 이종명 의원에게 내린 제명 처분도 최종 확정을 위해서는 의원총회 의결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네 차례 열린 의총에서 제명 건은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심지어 전당대회 이후로 징계가 유보됐던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 윤리위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당 차원의 징계와는 별도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물 윤리위'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3월 임시국회 첫날 전체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윤리특위는 전체회

의에서 5·18 망언 의원 징계 건을 포함해 20대 국회에 올라온 모든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넘겨 심사 의결을 구하기로 결의했다. 그래서 온 윤리심사자문위로 넘어갔는데 오는 4월 9일까지 자문위 의결을 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결국 이렇게 또 한 달이 지나가게 생겼다.

다음달 9일까지 심사 의결이 도착하면 다시 공은 윤리특위로 돌아온다. 문제는 윤리특위 의결에는 언제까지 결론을 내리는 시한이 없다는 점인데, 이렇게 해서 본회의까지 가 보지도 못하고 자동 폐기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징계 절차 개선이 나서야 한다.

국회 윤리특위의 징계안 심사 기한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의 징계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 표결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를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1670년께 한 강진 선비가 월출산 옥판봉 남쪽 산자락에 은거를 위한 공간을 만든다. 그는 대나무, 동백, 단풍나무가 우거진 자연 속에 약간의 인공적 조형을 더한 별서(別墅) 정원을 구상했다. 꾸밈 없는 세 칸 초가 사랑채를 짓고 주변 언덕에 100그루의 매화를 심었다. 또 계곡물을 안뜰로 끌어들이어 흙 굽이 물길(流瀾曲水)과 작은 연못을 만들고, 모란·국화·영산홍 등을 심은 3단 꽃계단을 조성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손자에게 "...나무 한 그루와 돌 하나라도 남에게 주는 자는 훌륭한 자제가 아니다"라며 이곳을 남에게 절대 팔지 말 것을 유언했다. '백운동은'(白雲洞隱)이라는 호를 사용했던 이 담로(1627~1701)의 이야기다.

그로부터 140여 년이 지난 1812년 음력 9월 12일, 유배 중이던 다산 정약옹이 초의선사 그리고 제자 윤동과 함께 월출산 산행을 한다. 다산 일행은 하산해 이곳에서 하룻밤을 묵는다. 이날 다산은 백운동 주인장 이덕휘와 교류하며 열 살이었던 아들 시현을 막내 제자로 받아들인다. 이때 다산은 깊은 인상을 받아 12수

의 연작시를 지었다. 월출산 옥판봉과 동백나무 숲길, 단풍나무 우거진 계곡, 푸른 이끼가 긴 바위 등 12경(景)을 읊은 '백운동 12승사'(勝事)다. 그리고 초의선사에게 백운동 정원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도록 했다. 이때 지은 다산 친필 시와 초의 백운동도를 합쳐만 들어진 '백운첩'(白雲帖)은 다시 189년이 흐른 2001년 6월 재발견돼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강진 백운동 원림(園林)이 최근 국가 지정문화재 명승(제115호)으로 지정됐다. 이곳은담양소쇄원, 완도 보길도 부용동 정원과 함께 '호남의 3대 정원'으로 손꼽힌다.

새봄이다. 수년 전 들렸던 이곳을 다시 찾아야겠다. 다산이 '산다경'(山茶徑)이라고 이름 붙인 원림 입구 동백나무 숲길을 지나 매화 만개한 원림의 봄 정취를 만끽하고 싶다. 무위사·백운동(안운마을)·강진다원·월남사지·달빛한옥마을로 이어지는 '남도유배길' 4코스를 따라 걷는다면 더욱 금상첨화 봄날 여행이겠다.

/송기문 문화2부장 song@

| | | | |
|--|-------------------|---------------------------|-------------------|
| 光州日報 | | The Kwangju Ilbo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 |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燦 | |
|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 |
|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내 |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 원국 | 220-0515 문화사업국 |
| 220-0649 | 220-0661 | (FAX 222-8005) | (FAX 222-0195) |
| 문 화 부 | 220-0661 | 220-0515 | (FAX 222-0195) |
| 문 화 부 | 220-0661 | 220-0652 | (FAX 222-0195) |
| 문 화 부 | 220-0661 | 220-0692 | (FAX 222-0195) |
| 문 화 부 | 220-0661 | 220-0693 | (FAX 222-0195) |
| 문 화 부 | 220-0661 | 220-0697 | (FAX 02-773-9331) |
| 문 화 부 | 220-0661 | 220-0697 | (FAX 02-773-9335)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